

# ‘보름달 민심’ 해석은 제각각

## 여 “국회정상화 채찍” 야 “세월호법이 우선” 국회 공전·파행 계속될 듯

한기위 연휴가 끝났지만 국회 공전과 파행은 앞으로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세월호 특별법 해결 방안과 ‘추석 민심’을 놓고 여야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10일 ‘추석 차례상’에서 모아진 민심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별도로, 국회부터 정상화시켜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라는 요구로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다른 현안들을 다룰 수 없다는 게 민심이라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추석 연휴 전에 여야가 각각 내세우던 주장에서 한 치도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앞으로도 민심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을 서로 되풀이하면서 대치 구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대체 휴일 직후인 11일부터 재가동해야 할 정기국회 역시 ‘개점휴업’ 상태를 한동안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90여 개 법안의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야당과의 협의를 계속 주문하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박대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 처리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식물국회에 총지부를 찍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주문했다.



**野 세월호법 촉구 단식농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단식농성장을 방문, 유족이 원하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19일째 단식 농성 중인 정청래 의원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국 파행의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국 표류는 여권이 세월호 유가족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세월호 특별법과 진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정부·여당이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공전이 계속되면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일정 등이 줄줄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함께, 국회 본연의 업무인 새해 예산안 심의와 주요 법안 심의도 파행을

거듭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해결책을 제시 못하는 답답한 여당과 무리한 요구를 고집하고 있는 야당이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여야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세월호 정국을 풀어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 광주시 ‘재난안전’ 관심없나

## 안전관리기금 12% 전국 최저 수준...법적기준 턱없이 부족

### 새정치 주승용 의원 지적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국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법적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여수 을·사진)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재난관리기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경기도와 인천시의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전무하고, 광주시도 12%에 그쳤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이나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최근 3년 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를 매년 적립해야 하는 기금이다.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시는 0%, 광주시 12%, 울산시 33%, 제주특별자치도 41%, 대구시 45%로, 6개 시·도 적립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반면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도, 전북도, 경북도 등 8개 시·도는



100% 적립률을 보였으며 충북도 93%, 전남도 77%, 경남도 68%의 적립률을 기록했다.

지난 1997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7개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확보 기준액은 총 3조 1061억4900만원으로, 이 중 3조 535억5300만원이 적립돼 평균 적립률이 82%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에도 인천시 24%, 광주시 24%, 울산시 38%, 대구시 43%로 4개 시·도는 50%를 밑돌았다.

주 의원은 “일부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적립과 관리가 허술하게 운영되면서 긴급 재난 발생시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추경 편성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권노갑 “野, 원내서 투쟁해야”

## 국회 절대로 멈춰선 안돼...새정치 전대, 총선·대선 새로운 계기될 것

세월호 특별법 정국과 관련, 권노갑(사진) 새정치민주연합 고문이 “새정치연합은 장외투쟁보다는 원내에서 싸워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권노갑 고문은 지난 7일 오후 화순의 한 음식점에서 세월호 특별법 정국에서의 새정치연합 장외 투쟁 논란과 관련,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며 “과거 한일 협정 반대 과정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천일파’라는 원색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원내에서 투쟁했었다”고 말했다.

권 고문은 이어 “장의 투쟁이 불가피하다라도 국회를 정지시키면 안 된다”며 “정 안되겠다면 원내의 병행 투쟁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고문은 또 “문재인 의원의 단식도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한 뒤 “단식 과정에 전화를 해서 원내에서 싸워야 한다는 입장을 문 의원에 전달했으며 문 의원에 이에 수긍했었다”고 전했다.

새정치연합을 둘러싼 암울한 현실에 대해서도 “호남은 물론 전국적으로 실망감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고 듣고 있다”며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 구



성이 잘 되고, 내년 1~2월 지도부가 새로 선출되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고문은 새정치연합의 차기 대선 주자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힌 뒤 “송영길 전 인천시장도 우량주였으나 지방선거 패배로 동력이 부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손학규 전 대표의 정계복귀와 차기 대선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의 순천·곡성 지역구 당선과 관련, 권 고문은 “새정치연합에 대한 실망감도 패배의 원인이지만 과거 통합진보당 후보에 공천을 양보했던 아권연대가 단초”라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담뱃값 인상안

## 與, 오늘 최고위 논의

새누리당은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논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10일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정부 측의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 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논의한다. 또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측의 보고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최종 보고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흡연을 줄이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혀 현재 2500원 수준의 담뱃값의 대폭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나친 담뱃값 인상은 주 소비층인 서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아 새누리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견해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박지정기자 jkpark@kwangju.co.kr

## “빈 페트병 재활용보다

## 폐기 비용이 적게들어”

### 새누리 주영순의원



플라스틱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것보다 폐기하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사진)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폐기를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폐기처리 비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5년 동안 빈 페트병을 재활용하는데 4813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양의 페트병을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했다면 2932억원이 소요돼, 재활용에 소요된 비용보다 1881억원이나 적게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 동안 페트병 재활용 규모는 단일재질 무색 46만3098t, 단일재질 유색 23만5943t, 복합재질 5만6572t으로 총 75만5613t에 달했다.

주 의원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환경부는 모호한 환경오염, 사회적 비용을 근거로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자료를 통해 정책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